

혁신도시 재검토 발상 왜 나왔나

균형정책 뒤엎을 시나리오 급조 의혹

감사원·국토부 혁신도시 지적 우연이라 하기엔...
현정부 국토 특화 '5+2 정책' 이식 위해 무리수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정당론' 이후 쏟아져 나온 '혁신도시 재검토 발상'은 현 정부의 전(前) 정부의 '국토균형' 정책을 뒤엎고, 현 정부의 '국토 특화' 정책을 이식하기 위해 급조된 시나리오일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시나리오의 지난 14일 국토연구원이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국토 정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을 때부터 1주일간 숨가쁘게 전개된 느낌이다. 다음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3배나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고,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혁신도시 문건에서 대안은 속 빠진 채 문제점들만 일부 중앙언론에 대서특별되는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처럼 같은 날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이 한꺼번에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기관에서 만든 주요 문건이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을 두고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과밀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해치고 후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물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21세기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경제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합의없이 정부가 주도해 수도권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을 연계해 추진한다면 지방에 머물러 있던 경쟁력있는 기업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엔 겉대기만 남아 '비대해진 수도권'과 '공동화된 지방'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쌍둥이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혁신도시 재검토 진행과정

- 14일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균형발전 강조하다 보면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등 부작용 초래".
15일
• 감사원 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과다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 보고서 유출.
• 국토해양부 작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보고서 유출.
16일
• 청와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20여개 공기업 이전 대상 재검토".
17일
•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보완 후 계속 추진".
18일
• 한승수 국무총리, "혁신도시 아직 결정된 것 없다"
• 이한구 정책위의장, "민영화 대상 공기업 지방자율 유치"



한승수 국무총리가 20일 총리 공관에서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에 따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쇠고기 협상 타결... 전남 축산농가 피해·대책

한우, 400억~900억 피해
양돈, 1천억 손실 불가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결정되자 한우 주산지인 전남의 축산농가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한우농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국내 축산농업을 포기한 처사라며 불발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마저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은 우선 미국산 쇠고기 값이 국산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LA갈비와 T본 스테이크 등이 수

락을 보인 만큼 충격은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돈농가의 예상 피해는 더 심각하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돼지고기와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대신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경우 가격 하락 폭은 한우 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양돈농가는 1천300가구로 총 92만 마리(전국 5위)를 기르고 있으며 연평균 매출액은 3천400억원이다.
전남도와 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최소 20%에서

1등급 쇠고기 비율 늘리고
규모화·전문화 만이 살길

입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특히 수입 쇠고기 값이 국산 돼지고기와 비슷해 국민의 고기라 할 수 있는 삼겹살을 대체할 경우 양돈농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는 분석이다.
◇가격 폭락 불가피=전남의 한우 산업 규모는 사육농가 3만4천 가구에 사육 두수 34만마리로 전국의 15%를 차지, 경북 48만 마리 사육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우의 연평균 매출은 4천500억원이며, 미국산 수입이 본격화되면 피해는 매출의 10~20%인 선인 450억원~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수입 초기에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격 하락 폭이 크겠지만 한우는 고가인 만큼 고정 수요층이 정해져 있어 10% 안팎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 농가와 판매상들은 20일 열린 나주 영산포 우시장의 거래에서 한우 값이 20% 하

30%의 손실(680억원~1천억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품질화, 수입산 국산 둔감 방지 등 제도 강화=개방에 따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전남 한우 농가들은 가격 경쟁력 대안 확보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1등급 이상 쇠고기의 비율을 현재 50%에서 70%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
더욱이 전남 한우농가는 10 마리 미만의 영세 사육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규모화와 전문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감해 한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생산에서 유통까지 쇠고기 생산인력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쇠고기 도축세 폐지·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축산업계가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을 추진한다. 또 한우가 제 값을 받고 품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도 예정대로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축산업계에 도축세 폐지 등 세제 지원을 확대

한다. 도축세(Butchery Tax)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가 소·돼지 가격의 1%이하를 도살자로부터 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높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취지다. 현재 축산 농가들은 소 값 전부(100%)를 보상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쇠고기 전면 허용은 조공”

야권 강력 반발

지난 18일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 타결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이 적절성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처리 여부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주기가만 하고 얻은 것은 없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라며 "이 같은 방식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라면 허

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준 선물치고는 너무 가혹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애기한 한미 FTA 비준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도 19일 오전 열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의 결실물이 됐던 쇠고기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대로 끝났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광개친 독주와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임동욱 기자 tuim@

Advertisement for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국립목포대학교) featuring a group of students and the slogan 'The center of the focus of the 21st century is here' (21세기의 중심이 바로 여기).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missions: 입학 상담 010-50-6000.